



조영아 기자

개혁, 개혁 하는데도 서민 삶은 더 팍팍하다



서진 조종진



조영아 기자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4~5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계급에
양보 강요하고
이간질시키는 기구

6~7면

예멘 난민 심사
한국 정부도 예멘 난민
발생에 책임 있다

12면

10.14 이주노동자 대회
내국인들의 불만을
이주자들에게 돌리지 말라

16면

조선업 위기
문재인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8~9면

비동의
간음죄에
관해

10면

박원순의
부동산 대책,
시장주의로 기울다

2면

시장주의적인 박원순의 서울시 부동산 대책

정선영

지난 9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택 대책은 “투기 조장책”(정의당 논평)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가 신도시 조성 등 민간 시장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들고 나온 탓이다. 사실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얘기는 초등학교도 안 믿는다. 오히려 투기 붐이 일어 집값을 요동치게 만들 뿐이다.

게다가 진보·좌파가 요구해 온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신도시의 35퍼센트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전 신도시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 20퍼센트 가량이었지만 실제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가가 민간 시세의 90퍼센트나 돼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이번에 정부는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활용”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박원순의 주택 정책이 딱히 더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박원순은 도심 외곽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도심 업무 빌딩을 주거용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건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

시장 원리에 기반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심 빌딩 주택은 공적 지원이 크지 않다면 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박원순은 “중산



아파트는 이렇게 많아도 노동자와 서민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층에게 도심 임대주택을 제공해 보증금을 상당한 정도로 받고 그걸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마련 대책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이 전도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이 정책은 이미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이익 확대’용”이라고 비판받은 서울시의 “청년주택 정책”의 확대판이 될 듯하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을 시행했다. 역세권에서 건물주들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건물의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규제 완화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 민간 주택사업자들은 1400여억 원에 달하는 땅값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

다.(정동영 의원실 추산) 이에 비해 청년주택 3곳(용산구 한강로, 서대문구 충정로, 마포구 서교동)의 평균 보증금은 면적 15~21제곱미터 기준으로 보증금 3600만~4500만 원에 월세 34만~42만 원에 달했다. 민간 주택사업자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청년들은 감당하기 힘든 허울뿐인 공공주택인 것이다.

이처럼 시장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엥겔스는 이미 1872년에 출판한 《주택 문제》에서 주택 문제를 “수요와 공급의 잠자적인 균형에 의해 해결”하려는 것은 “그 자체가 부단히 문제를 새로이 발생시키며 따라서 그것은 아무런 해결 방도도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썼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의 서울시는 온건한 개혁인 건설 원가 공개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경기도만이 시도하고 있다.)

값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노동자·서민에게 엄청난 집인 주택 문제를 완화하려면 값싼 양질의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 이는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삶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가능하다.

자본이 점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상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이미 과밀화한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민중당 등은 용산미군기지 터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서민층

의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진보진영의 여러 단체들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해제하는 지역 전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면 지지할 수 있다는 조건부 지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물론 계급 불평등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역이 슬럼화하거나 기피 시설처럼 여겨지는 현상은 사라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대안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가난한 노동자·서민들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진보진영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들은 지지할 만하다.

그런데 박원순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진보진영이 고심해서 내놓고 있는 대안들을 반대하고 있다. 박원순은 환경을 우선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 문제도 노동계급의 삶의 문제와의 조화 속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을 전전해야 하는 주거 취약층의 건강과 삶의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당장에 서울의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화력발전소 폐지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 가스 규제 대폭 강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박원순의 관련 대책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고, 시장을 거스르기보다는 노동계급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8년 도시개발로 쫓겨나야 했던 철거민들의 처절한 투쟁과 대규모 노동자 투쟁의 파고 속에서 도입됐었다. 이후 친시장적 압력 속에 애초의 취지가 왜곡되며 후퇴해 왔다. 제대로 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도입되기 위해서도 계급 투쟁이 강화되어야 한다.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김승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후 일본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고도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2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하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10억 엔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본의 잔학무도한 전쟁 범죄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향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단 해산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 해산보다 더 뜨거운 쟁점은 10억 엔의 **행방**이다. 일본 정부는 이 돈을 결코 돌려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합의 파기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합의 파기는 커녕 재협상도 할 생각이 없다. 일본 관방장관 니시무라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일 합의를 파기하지 않겠다.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재차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합의 파기 선언은 하지 않은 채 10억 엔 반환마저 유보하고

이를 한국 돈으로 대신하려 한다.

지난해 이맘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본지는 당시에도 이를 비판했다. 피해자들이 10억 엔을 거부한 이유는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직접 도장 찍는 꼴이기 때문이었다. 합의 파기가 진정한 핵심 쟁점이 지, 10억 엔을 한국 돈으로 주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아니다.

정의기억연대(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10억 엔의 우리 정부 예산 편성은 …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의 반발 때문에 사실상 출근하는 직원 없이 이미 멈춰 있는 상태다. 따라서 해산 선언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인의 이번 재단 해산 시

사 발언은 생색내기로 보인다.

일본에게 과거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제는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시도에 걸림돌이고, 미국에게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에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오늘날의 제국주의 질서와도 깊이 관련돼 있다.

역대 한국 정부는 광범한 대중의 분노와 제국주의 압력 사이에 끼여 시간을 끌다가 결국 후자 쪽에 섰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전통 우파들보다 덜 노골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그 압력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강행 등에서 이 점은 여러 차례 증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위안부 외교 회담과 함께 추진해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한일군사정

보보호협정도 슬그머니 연장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식민지를 상대로 벌인 전쟁 범죄이므로, 한국 정부에게는 피해자들을 대변해 이 문제를 해결(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제대로 된 사죄·배상 등)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1년 보수적인 현재마저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1월 강경화 장관 스스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재단 해산 조처만으로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손 털게 뒤선 안 되는 이유다. 위안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실마리는 한미(일) 동맹에 반대하는 제국주의 반대 투쟁에서 찾아 나가야 한다.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제

강동훈

지난해 회복세를 보인 세계경제는 올해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낮췄다. 3개월 전인 7월보다 0.2퍼센트포인트 낮춘 것이다.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낮춘 것은 2016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시 낮아지는 것은 최근 경기 반등을 가져왔던 힘들이 점차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16년 하반기부터 늘어났던 전 세계 투자 증가세가 올 들어 꺾이기 시작했다. 최근 투자 증가세가 짧고 미진했다는 점은 최근의 투자 증가가 기업 수익성이 일반적으로 회복된 데 따른 것이 아니고, 그전 몇 년간(특히 2015~2016년) 투자 위축을 만회하는 정도의 일시적 증가였다는 점을 보여 준다. 즉, 최근의 경기 회복은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아니고 일시적인 반등이었던 것이다.

한편,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와 이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는 세계경제의 주요 불안정 요소인 부채 급등 문제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유럽의 양적완화가 축소되는 등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이 강화되고 있어 이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높은 부채와 금리 인상 등으로 자산가격 상승도 꺾였다. 미국 주가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유럽,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의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다. 세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멈춘 상황이다. 이는 주요국들의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등에 타격을 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저금리가 만든 높은 부채 때문에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 들어 아르헨티나와 터키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다른 여러 신흥국으로 위기가 퍼진 데 이어, 최근에는 파키스탄이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이집트와 남아공을 비롯한 신흥국들도 단기 외채가 많아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신흥국 위기가 1997~1998년 동아시아처럼 연쇄적인 외환 위기로 터진다면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Q.용어설명

양적완화

제로 금리가 된 후에도 중앙은행이 국제나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을 매입해 금융시장에 돈을 주입하는 정책이다. 그러면 시중 금리가 더욱 떨어져 기업들이 투자하기 쉬워진다.

지급준비율

은행이 고객에게서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줄어들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어난다.



투자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노동강도 강화로 고용 증가세가 크게 위축됐다

무역 전쟁과 중국 경제 불안정

한편, 미·중 무역 전쟁으로 내년 세계 교역이 더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미·중 간 교역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면서 세계 두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를 악화시키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1퍼센트포인트 내려, 시중에 1조 2000억 위안(약 197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올해 3차례나 지급준비율을 낮춘 바 있는데도 말이다. 또, 중국 정부는 올해 감세 목표액을 1조 1000억 위안에서 1조 3000억 위안(약 213조 원)으로 높이며 기업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방 정부들에게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펴고 있는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더 큰 위험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 중국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막대한 부채가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급준비율 인하로 이미 약세인 위안화는 더욱 큰 압력을 받을 것이다. 위안화는 이미 올해 9퍼센트가량 떨어져 달러당 7위안에 가까워졌는데, 최근의 경기 부양책으로 위안화 약세가 지속돼 조만간 환율이 7위안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 수출 기업이 관세 타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위안화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하면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달

려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게다가 위안화 약세(환율 상승)는 미국 트럼프 정부나 EU 등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전체 수출의 4분의 1) 중 5퍼센트 정도만 미국으로 재수출된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도 한국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최근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한국 수출이 중국 경제 자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격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 중국 경제 자체에 타격을 줄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 경제

— 투자 감소와 ‘고용 참사’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9일 우리 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퍼센트에서 2.8퍼센트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각각 낮췄다. 이미 지난 7월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낮췄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에 따른 영향이 한국에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10월 2일 발표한 ‘8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기업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1.4퍼센트 감소했다.

기업 설비투자는 지난 3월 이후 연속 6개월째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수준이다.

물론 올해 투자 감소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급증한 반도체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투자가 60퍼센트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 설비투자가 16퍼센트나 증가했으나, 올해 초 반도체 투자가 일단락되며 2분기 전체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투자할 부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같은 투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 증가세도 크게 떨어졌다.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32만 명 수준에서 올해 1~8월 10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위축됐다. 7월과 8월에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과 3000명만 증가하는 ‘고용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9월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임금 상승 부담을 피하려고 기업들과 사용자들이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대응한 것도 ‘고용 참사’에 한몫한 듯하다. 7, 8월 고용통계를 보면, 올해 구조조정이 벌어진 제조업뿐 아니라, 저임금 청소 노동자 등이 속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감소했다.(산업별 비중으로 보면 후자가 훨씬 크다. 이 외에 도 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많이 감소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할 뿐 아니라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하는 이유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미 간 금리가 2017년 역전된 데다, 최근에는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만도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기준금리가 2.0~2.25퍼센트인데 반해, 한국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퍼센트로 올린 이후 10개월째 동결 중이다. 이 때문에 한국도 11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기업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15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큰 타격을 주고,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건설 경기에 타격을 줄 공산이 크다.

이처럼 투자 감소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하고, 고용 상황도 악화하자, 문재인 정부는 기업 투자에 도움을 주려고 친기업적 행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9월 20일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집중된 때를 이용해 규제프리존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자신들 스스로 이 법을 박근혜 정부의 적폐이고,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비난해 놓고는 말이다. 10월 들어서도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며 규제 완화를 밀어붙일 태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쫓다 뺏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한 것도 모자라,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도 다시 꺼내들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 수정·보완 필요성”이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 정부는 임금 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 상황이 나쁘다고 거듭 우려하면서도 사회서비스공단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약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문재인 자신의 말)이라며 기업 지원에만 열을 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상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은 최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조류”라며,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막대한 관세를 물리는 와중에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올리려면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도 친기업 행보를 강화해 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끌어들이려 협상하려는 경사노위 등도 노동계급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친기업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노동운동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할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변변찮은 개혁도 연기가 쉽지 않고, 조건을 지키려 해도 큰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들의 위기 전가 정책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개혁을 이루는 유일한 방안이다.

기획 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본지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에 관해 다음 순서로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하려 한다.

- 1)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 2)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 3)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 4)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 5)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 6) 기술 혁신과 노동자들의 처지
- 7) 노동조합 투사들은 기술 혁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김하영(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법석이 도무지 식을 줄 모른다. 과장된 언론 보도들이 줄을 잇고, 관련 도서가 넘쳐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의 새 이름)도 산하에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를 설치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세돌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결 이후 크게 유행했다. 알파고 승리의 과대 선전 속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경제는 물론 우리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신화가 널리 퍼졌다.(알파고 승리를 둘러싼 과대 선전에 관해서는 2016년 4월 6일 본지 170호에 실린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와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를 보라.)

한국정보통신학회는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면서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옹호자들은 “과학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혁명의 속도와 깊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경제 질서는 종언을 고하고 산업과 노동 모두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발전에 “혁명”이라는 낱말을 붙이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다. 2010년 독일이 발표한 “하이테크 전략 2020”의 하나인 “인더스트리 4.0”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듯이 “혁명”이라는 낱말이 붙어 있지 않다. 도대체 “디지털 혁명”(또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무엇이 다른지는 지적이 있어서다.(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도 결코 “혁명”이라고 할 만한 경제·사회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인더스트리 4.0이 발표되고 몇 년 뒤인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화두를 다시 꺼냈는데, 그것을 받아 살린 일등공신이 아마 한국일 것이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열풍이 유

난한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꼬집는다.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의 책 《제4차 산업혁명》(새로운현재)이 전 세계에서 100만 부가 팔렸는데 그중 30만 부 이상이 한국에서 팔렸다니, 그런 말이 나올 법하다.

이는 한국인들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띄우고 언론과 학계 등이 요란스럽게 장단을 맞춘 결과다.

알파고 대국 직후 당시 대통령 박근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선언하고 그것을 자신의 선전 구호인 “창조경제”와 연결시켰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추진했고, 노동 “개혁”(적폐)을 정당화했다. 박근혜가 탄핵 재판을 앞두고 읽고 있던 책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도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4차 산업혁명에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선전 구호인 “혁신성장”과 연결시키고 있다. 박근혜의 청와대에 초대됐던 클라우스 슈밥은 주인이 바뀐 문재인인의 청와대에도 초대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앞에 “사람 중심”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것 정도다. 그러나 수식어는 수식어일 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통신 관련 부처의 계획들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법석을 떠는 이유는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구할 대안이 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문재인은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기회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가능하려면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말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신기술 관련 산업 분야에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는 “규제혁신 5법”을 추진해 왔다. 그중 3개가 지난 9월 하순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은산 분리 규제완화도 통과됐다. 이 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4차 산업혁명의 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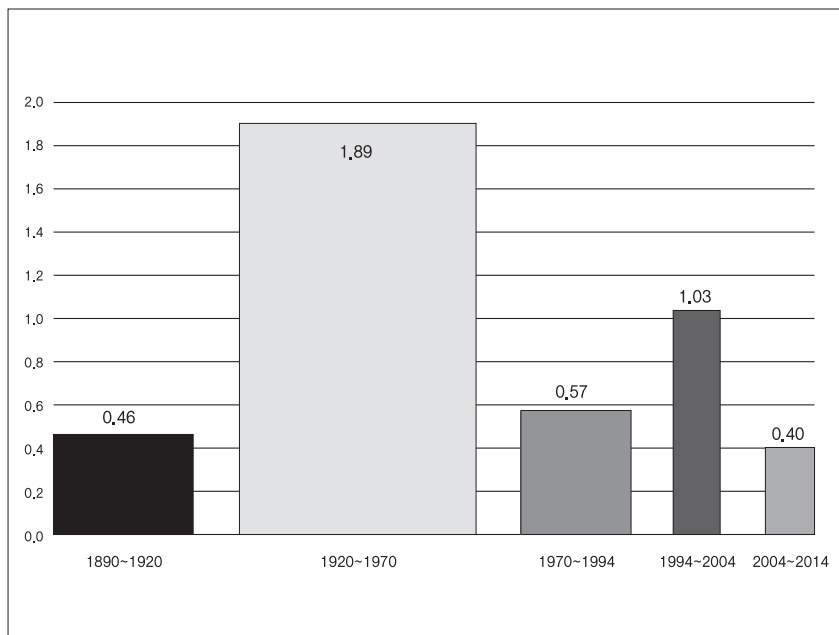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이 8월 7일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 간담회를 찾아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요컨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신화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발이 척척 맞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음을 잘 보여 줬다.

이제 그들은 또다시 합심해, 노동자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며 노동 “개혁”(적폐의 재연)도 추진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고용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말이다.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 디지털 혁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디지털화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요란을 떠는 것이 한국 정·재계만의 예외적 현상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에 열광하며,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나서기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독일이 인더스트리 4.0 개념을 내놓은 것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도 첨단기술과 제조업의 접목을 추진하

는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정책을 마련했다. 일본과 중국도 각각 “로봇 신전략”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자본주의 생산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경제를 장기 침체에서 끌어내어 새로운 성장 시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헛된 기대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도 컴퓨터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졌다는 주장이 유행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던 미국 “신경제”가 퇴조하면서 그런 신화는 산산조각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J 고든은 “디지털 혁명”이 생산성 증가에 그리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영향은] 1996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타났다[고], ... 지속적이 아닌 일시적 현상이었다[다.] ... 2004~2014년 동안의 10년은 미국 역사상 생산성 증가가 가장 둔화된 시기였다.”(로버트 J 고든,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생각의힘)

한편,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고(故) 크리스 하먼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그 발전 속도 때문에 다른 자본

▶ 5면으로 이어짐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장호중

일자리위원회는 10월 4일 열린 8차 회의에서(문재인 참석)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 7000개(민간 9만 2000개, 정부 지원 사업 1만 5000개) 창출을 위한 140여 개 민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5월 11일에 발표한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재탕한 것인데 일자리 규모는 당시 19만 7천 개의 절반으로 줄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규제프리존법을 왜 ‘기업 정부 입법’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다. 문재인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일자리, 즉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정책일 뿐이다.

예컨대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 건설을 위해 농지와 국·공유지, 공유수면 등을 싼값에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한다. 그리고 바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규제프리존법에 담겼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실증(실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전력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손잡고 이런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차(자율차, 전기차, 수소차 등) 개발과 시범 운영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프리존법에서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가스안전관리법, 국공유지 임대와 활용법의 규제에 예외를 둔 것이 이 때문인 듯하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공공기관에 축적된 개인정보(빅데이터) 활용과,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규제완화 법률이 일부는 국회를 통과했고 일부는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기업주들이 실제 얼마나 투자를 할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사업은 여전히 기술 ‘개발’ 단계일 뿐이라 나중에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가 투자를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아직 투자가 결정되

지도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부풀린 수치일 뿐이다.

문재인은 정부가 기업주들을 지원하면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르는데, 실제로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지는 확실치 않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투자가 늘지 않은 것은 세계 경제 전체의 이윤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결정은 기업 이사회에 맡겨져 있는데 이들은 ‘충분한’ 이윤, 즉 다른 곳(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보다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런 친기업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선순환의 출발이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이라는 논리는 임금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명분도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취한 태도가 모두 일맥상통한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제시”를 민주노총의 과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게다가 기업 투자를 돕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규제 완화는 공공서비스와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정말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건설될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은 민간기업 소유이다. 따라서 전체 전력 생산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전력 민영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에는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로교통법, 가스안전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예외를 두는 것도 기업 이윤을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조처다.

한편, 민주노총은 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안전으로 상정된 것에 항의하며 불참을 통보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불참한 회의에서 해당 안전이 그대로 결정됐고 그 내용 중 일부가 발표되는데도, 8차 회의에는 별다른 비판 없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산하연맹 지도자들은 사회적 대화 그 자체에 기댈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에 일관되게 맞서야 한다.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지난 10월 2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협상) 타결 방침’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한다. 핵심은 고용을 지키기 위해 임금·조건의 후퇴나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 영향이 일시적이어야 한다거나, 고용 안정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양보교섭의 확대와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금속노조 중집이 이번 방침을 정한 데에는 두 가지 핵심 근거가 제시됐다. 첫째, 경제 불황 상황에서는 고용 유지를 위해 구조조정 공격에 수세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노동운동의 경험을 보면 수세적 대응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바닥을 향한 양보의 악순환만 낳을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구조조정에 맞설 투쟁의 힘을 갉아먹을 위험이 있다.

둘째, 이미 양보교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금속노조 방침을 유지하면, 노조 중앙이 빠진 채 기업별 협상 체결을 방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부 지부·지회 지도부의 잘못을 추수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양보를 정당화하는 논리일 뿐이다. 산별노조가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며 강제하려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단결을 조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고용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임금의 대폭 삭감과 조건 후퇴 등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고 있는 마당에, 금속노조가 이를 단호히 규탄하며 투쟁하기보다 양보교섭을 인정한 것은 매우 우려했다.

박설

▶ 4면에서 이어짐

설비보다 빠르게 구식이 된 것, 즉 고정자산의 수명 문제를 지적했다. 기업들은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 투자해서 얻는 이윤 증가분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또, 신기술이 산업 전체로 확대되면서 신기술로 생산된 상품의 가격이 폭락하고 경쟁이 격화됐다. 컴퓨터 기술 혁신이 지속적인 호황을 만들어 내지 못한 이유다.

반복되는 불황 같은 기존 경제의 난점을 정보통신기술이 극복하게 해준다는 허풍스러운 낙관은 흔히 “무어의 법칙”을 하나의 근거로 삼았다. 인텔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가 1965년에 발표한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컴퓨터 칩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

는 18~24개월마다 감절로 증가한다.

그러나 로버트 J 고든은 2006년 이후 무어가 예측한 발전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여 줬다. 2009년에는 트랜지스터 수가 감절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년으로 치솟았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고든은 앞으로 “닷컴시대 같은 상황[일시적이거나 생산성을 증가시킨]이 재현될 조짐은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세계경제가 미국발 금융 공황에서 시작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 정보통신기술이 생산성 증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워졌다. 클라우드 슈밥조차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증대하지 않았고, 2008년 대침체 직후 고성장 패턴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한다(클라우드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그래도 디지털 혁명에 대한 과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위기가 장기화할수록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류를 대침체에서 끌어내어 새 세계로 이끌 것처럼 허풍을 떤다. 마치 지금 혁신 투자 불이라도 일고 있는 듯이 말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다르다. 기술 혁신이 경제 활력을 이끌기보다 오히려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가 기계화·자동화의 속도를 억제하는 양상이다. 기업들은 이윤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에 조심스럽다. 가령 반도체 기업들은 2016년 마침내 “무어의 법칙”을 폐기하고 속도를 늦췄는데, “개발비에 걸

맞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유의 하나였다. 기존 속도를 유지하려면 개별 공장당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고 분석가들은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함께 푹 떨어졌다. 상장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0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였다. 특히, 설비투자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기계류 투자의 감소가 설비투자 감소를 이끌고 있다.

일부 논평가들은 기술 혁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경제의 커다란 수수께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미 오래 전에 그 동역학을 설명했다. 개별 자본가들은 혁신 기

술을 도입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경쟁자보다 우위에 서려 한다. 하지만 이 경쟁적 축적은 체제 전체 차원에서는 이윤율 하락을 압박한다. 노동만이 가치를 만들므로,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가 이뤄지면 투하 자본에 비해 적은 가치만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생산은 위기를 겪게 되고, 그러면 신기술 도입으로 생긴 이득은 사라진다.

신경제의 파탄부터 2008년 이후 경제의 장기 침체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진보가 마르크스가 분석한 자본 축적의 모순을 결코 비껴가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체제의 옹호자들이 모순투성이 체제에 새 이름 — 신경제든 신자본주의든 포스트자본주의든 — 을 붙여 쥐 왔을지라도 말이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그동안 <노동자 연대> 신문에 실린 사회적 대화 관련 여러 기사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정원

한국 경제는 생산이나 투자 감소, 고용 지표 악화 등으로 먹구름이 가득하다. 터키 등 신흥국 위기(금융시장 불안정)나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미칠 파장(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용자들의 위기 의식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고, 그러면서 빠르게 우경화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때를 이용해 일사천리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켰다. 대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에 입법을 청원했던 속원이었고, 후보자 시절 문재인이 박근혜의 “적폐”라고 규정했던 바로 그 법이다. 의료 영리화 조

처, 전력 산업의 부분 사영화, 가스·건축·도로·소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 완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봐도, 문재인 정부가 ‘돈 안 드는 개혁’을 추진한 탓에 노동자들의 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불거졌다.

조선업과 한국GM, 금호타이어 등의 구조조정 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일 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일자리 학살에 앞장섰음을 보여 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아예 노골적으로 내던졌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면 경제도 살아난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말잔치는 현실과 다르게 늘 친기업 정책으로 기울어왔다. 문재인은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저성장 위기를 겪는 한국 자본주의를 ‘혁신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



“사기치지 마라!” 문재인의 배신에 실망해 노동자 8만 명이 모였던 6월 30일 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가 경사노위를 통해 얻으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에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노사정위의 후신) 위원장은 조직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노조 있는 곳의 노동자는 임금도 한껏 올랐다. 그때부터는 굳이 투쟁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뷰 진행자가 “그러면 경사노위는 싸움을 말리는 곳입니까?” 하고 묻자 문 위원장은 “그렇죠” 하고 답했다(YTN 생생인터뷰 2018년 8월 28일).

또, 문성현 위원장은 최근 “성동선 해양 상생 협약”을 중재하면서 이를 구조조정의 모범인 것처럼 제시했다. 이것은 정리해고를 철회시킨 협약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자들은 무려 28개월간 무급휴직을 하고 M&A(인수·합병)와 경영정상화에 협력한다는 거의 백지 위임에 가까운 희생을 강요당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런 방법이 ‘갑원 위주 구조조정의 대안’이라고 치켜세운다.

이런 사례들은 경사노위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이것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노동자들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이자, 노동자 투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 협조(계급 협조)를 강조한다. 문성현 씨 표현을 빌리면, “노동자이지만 사용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노사 공동운명체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외의 사회적 대화·협약 사례나 1998년 한국의 경험은 타협의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동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들에서 1980년대 이래로 추진

된 사회적 합의는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노사협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억제, 복지비 삭감 등 노동계급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치들로 채워졌다. 이런 양보는 고용을 지키는 방안으로 여겨졌지만, 현실은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냈다. 그 결과 독일·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등 모든 북유럽 나라들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

게다가 이런 양보와 노조들의 투쟁 자체로 노조 조직률이 급감하고, 세력이 약화됐다.

이처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파트너십 추구는 노동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계급 협조주의를 부추겨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때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불필요하게 타협하면서 노동자 투쟁을 자제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에 간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대화하면서도 우향우 정책은 지속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실현되기는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촛불운동의 효과가 나타나 노동조합 운동은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내내 항의 투쟁을 벌였고, 최저임금 쟁다 뺏기에 항의하는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도 벌어졌다.

이런 투쟁들이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폭로하는 구실을 했고, 문재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이는 6월 30일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로 확연히 드러났다. 이후 문재인인의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한 데는 노동자들의 항의와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 들어서는 파업도 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투쟁들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6월 30일 대규모 항의는 민주노총이 노동자 투쟁들을 보편화할 좋은 계기였지만, 시위 직후 전격적인 문재인과의 면담을 추진해 투쟁의 김을 빼 버렸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화 일변도가 아니라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강조한다.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한 후, 지도부는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날짜를 계속 늦춰 왔다. 정부의 내년 국정 운영기조 수립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겨냥한 10월 19일 1차 파업과 11월 17일 파업안은 11월 7일 파업으로 수정됐다. 급기야 남북정상회담 기간이자 규제프리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9월 20일) 민주노총 중집은 파업 시기를 11월 중하순으로 또 늦췄다. 11월

말 국회 본회의를 앞둔 “선제적 파업”이라는 군색한 변명을 달아서 말이다.

특히, 민주노총 중집이 노사정 대화로 복귀하고 각종 대화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민주노총이 최소한의 신뢰 회복 조치로서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던 것들은 거둬 무시되고 우향우 정책이 쏟아졌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같은 현안 외면, 규제완화법 추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이정미 의원 배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노동부 차관 이재갑을 신임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등이 그런 사례였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와 그 본질을 폭로하고 그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자고 독려해야 하는데, 이처럼 지도부가 투쟁 시기를 늦추며 대화 추진에 주력하는 것을 지켜 보는 노동자들은 투쟁 의지를 현실감 있게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경사노위 참가 말고 파업을 앞당겨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변변찮은 개혁도 연기가 쉽지 않고 조건을 지키려 해도 큰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하반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대개 그렇다. ILO 핵심협약 비준도 선언에 그치지 못하게 하려면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게다가 지금 국회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안과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근기법 개악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임금 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가를 결정해 사회적 대화에 열중할 일이 아니다. 오

히려 파업 시기를 앞당기고 투쟁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노동자대회 직전이나 직후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사기가 나쁜 것도 아니므로 투쟁 동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올해 들어 파업이 늘고 이 중 일부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0월 하순부터는 대규모 집회들도 예고돼 있다. 10월 하순 공공운수노조의 대규모 집회, 11월 9일 공무원노조 대규모 연가 투쟁, 11월 10일 건설연맹 파업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집결 등이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성취하려면 이런 투쟁들을 사회적 대화와 협상을 위한 동원 수단으로 종속시키

지 말고, 문재인인의 우경화와 노동계급 공격에 맞서는 반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이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에 요구되는 과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 의제를 “사회적 공론화”하려 해도 그것은 사회적 대화보다 단호한 투쟁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좌파 활동가들은 10월 17~18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 정책의 문제점, 사회적 대화의 효과와 그 합의 내용의 문제점 등을 폭로하며 경사노위 참가 안건의 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기층에서 투쟁을 고무하며 노동자 계급정치를 바탕으로 연대가 확대되도록 애써야 한다.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사회적 대화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본질을 보여 준다.

첫째,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보여 준다.

이 합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간 추진해 온 계획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을 공산이 커 보인다. 더구나 복지를 더 악화시키거나 빈곤층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들도 담겼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EITC)는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의 일부로 생겨났다.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기초생활보장비를 그대로 둔 채, 한 톨이라도 더 받으려면 저임금 저질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연계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의 사회투자국가론과 마찬가지로 유연안정성 모델에 기초한 것이다. 즉, 고용의 유연성(쉬운 해고)을 추구하되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되거나 아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취업 지원과 복지('안정')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를 비판하지 않고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경사노위 산하 특별위원회 논의도 위험성이 있다. 정부는 연금 인상 계획은 없이 보



문재인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평양에 데려간 사이에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됐다

험료만 인상하는 안을 올리려 하고 여기에 민간 연금보험 강화 방안까지 내놓으려 한다. 이런 방향은 노동자들에게 복지 부담을 떠넘기는 신자유주의적 복지 개혁의 핵심이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와 친정부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을 적극 설득하고 나설 것이 뻔하다. 따라서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 즉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연금은 인상하는 조처를 관철시키려면 사회적 대화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를 강제할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개혁을 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은 불안한 일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보험료 2퍼센트포인트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최근 일자리위원회는 기업들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까지 140여 개 민간 프로젝트를 지원해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프리존법 등 최근 통과된 법률에 따라 규제완화를 추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프로젝트 지원방안'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포장했지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인지는 불확실하다. 반면 이를 위해 안전과 공공성을 후퇴시킬 가능성은 매우 크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성장 추진에는 이토록 신속한 반면,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는 매우 미온적이다. 대

표적으로 34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공립 시설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계획은 대폭 후퇴하기까지 했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과 업종의 일자리 창출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의 대표적 사례인 '광주형 일자리'는 '공정'(또는 '적정') 임금 적용을 내세우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초임 연봉이 2100만 원으로 논의되고 있음이 최근 폭로됐다.

업종 수준의 사회적 대화인 '공공병원 노사정 TF'(정부, 서울시, 공공병원 사용자, 보건의료노조)가 내놓은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도 큰 문제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정부의 '표준임금모델'과 매우 흡사하다.

사회적 대화는 사회 개혁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가가 "사회복지 제도 개혁과 방향 수립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지도자 다수와 노조 바깥의 정치적 개혁주의자들은 이를 통해 빈곤과 양극화 등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해를 완화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도 대폭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맺은 사회협약은 사회개혁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두루 알다시피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개혁을 위한다며 재벌개혁 초저로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구조조정 추진에 합의했다. 특히, 구조조정은 고용 불안정화를 뜻했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재벌 기업들은 그 뒤로도 규모가 더 커지고 영향력도 강화됐다. 그러는 동안 비정규직과 빈곤층이 늘어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됐다.

민주노총이 개혁을 성취하려면 부자 증세와 정부의 복지 재정 대폭 확충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이윤을 파괴할 능력과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힘은 노동자 투쟁만이 발휘할 수 있고, 제대로 발휘될 때 광범한 지지도 얻을 수 있다.

파업으로 성과를 낸 대우조선 식당 노동자들

김지태

얼마 전 첫 파업에 나섰던 대우조선식당(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이 빼앗겼던 임금의 일부를 쟁취하면서 성과를 냈다. 올해 상반기 사측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토요일 주휴수당을 폐지하자,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투쟁했다.

노동자들은 9월 11일 6시간 파업에 이어 14일에는 전면파업을 벌였다.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해 높은 단결력을 보여 줬다. 9월 14일 노동자들은 대우조선에 방문한 문재인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정부가 우리 억울함을 들어 달라'며 파업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투쟁으로 노동자들은 꽤 성과를 냈다. 월 임금 8만 원 인상, 사측이

일방적으로 폐지했던 토요일 주휴수당 복구, 체불된 임금의 일부 지급 등을 따냈다. 이런 내용의 잠정합의는 9월 21일 투표자의 85.5퍼센트가 지지해 가결됐다.

이번 투쟁은 조선업 구조조정 속에서 심각한 고용 불안과 조건 후퇴를 당했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해 싸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수년간 원하청 노동자들 모두 임금이 삭감된 현실에서 투쟁으로 조건을 지킬 수 있음도 보여 줬다.

심용환 웰리브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파업으로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우리의 힘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뭉치면 우리가 원하는 직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9월 14일 문재인이 대우조선 방문에 맞춰 파업 집회를 벌인 노동자들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박철

약간의 수주 회복, 그러나 여전한 위기와 불안정성

조선업은 장기 불황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이다. 2008년 이후 중소 규모 조선소 20개 이상이 문을 닫았고, 2015년부터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빅 3도 본격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다.

조선업 인력 규모는 2014년 20만 3000여 명에서 2017년 11만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 났다(조선해양플랜트협회). 사용자들이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빅3 중 인력 감축이 가장 극심했다. 2014년 말 6만 9000여 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절반 이하인 3만 2000여 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도 해양플랜트 부문에서만 비정규직 수천 명이 해고되고, 희망퇴직·조기정년 등이 이어졌다.

물론 최근에는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의 조선해양 분석기관인 클락슨은 “다시 호황이 시작됐다”고까지 전망했다. 지난해 세계 발주량이 2016년의 갑절 가량으로 늘었고, 2020년부터 시행될 환경 규제로 선박 교체가 급증할 것이라는 등의 근거가 제시됐다. 이는 국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뿐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도 일정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주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유조선, LNG선, 컨테이너선 등 한국 조선업체들의 주력 선종이 많아, 조선업 빅3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선박 189척을 수주했다.

그러나 회복의 수준은 아직 불황을 타개하기에 역부족이다. 클락슨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2016년은 수주 절벽이 극심했던 때다. 당시 세계 수주량은 이전 5년 평균의 30퍼센트에도 못 미쳤고, 2008년 세계경제 공황 직전에 견주면 12퍼센트밖에 안 됐다. 올해는 상황이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물론 이 속에서도 한국 조선업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수주량을 늘리고 있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더구나 2012년 이래로 상당한 수익을 내다 급격히 축소된 해양플랜트 부문은 신규 수주는 물론 수주 잔량도 바닥가 크게 위축된 데다, 미국 셰일오일에 밀려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마저도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 한국 조선업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에 밀리고 있다.

무엇보다 조선업 경기는 세계경제에 따라 갈수록 침체가 장기화하고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은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요인인데, 그로 인해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면 조선업은 직접 타격을 입는다. 이미 철강 판세로 선박의 후반 가격이 올라 수익성을 제약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조선업 경기 회복을 전망하는 사람들도 시장 자체의 변화보다는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발주 증가에 기대를 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예고한 대로 2020년에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량을 규제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적어도 8000~9000척의 선박 교체가 예상된다.

그러나 그조차 경제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봐야 한다. 예컨대, 국제해사기구는 지난해 9월 선박의 평형수 처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협약을 발표했다. 이 규제는 노후 선박 교체 주기를 앞당겨 발주를 늘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막상 협약이 발표됐을 때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사들의 비용 부담을 걱정하며 장치 설치 기한을 2024년

Q. 용어설명
후판
선박 제작 등에 사용되는 두께 6mm 이상의 철판

9월까지 연장해 줬다. 7년간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을 볼 때 황산화물 함유량 규제의 운명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단호한 저항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정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조선업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임금이크이고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일자리를 잃는 등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경제 불황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개혁주의적 노조 지도자들도 경제 불황 상황에서는 노동자들도 고통을 어느 정도 분담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곤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결코 경제 불황의 자연스런 결과가 아니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목적의식적으로 불황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봤듯이, 문재인 정부는 중소 규모 조선소들과 한국GM 등에서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장본인이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시장 중심 구조조정’ 방침에 힘입어 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다.

이런 공격에 맞서려면 현재의 불황 상황을 현실로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사용자들이 밀어붙이는 공격의 배경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그에 적절히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비용을 줄이고 외주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서는 무급휴직 시도가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STX조선에서, 얼마 전 성동조선에서 그것이 이뤄졌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일부 활동가들은 ‘현대중공업 사측이’ 위기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노동자들에게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넣고, 저항의 태세를 흐트러뜨릴 위험이 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구조조정에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도 단호하게 저항해야 일자리와 삶을 지킬 수 있다.



지난 8월 20일 부산조선조선업노동조합

문재인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 노동자 말려죽이기

조선업 사용자들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어쩌면 그 이상까지 “노는 일손”, “임여 인력”이 많다고 보고,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노동조건 악화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사실 이들은 일감이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비용을 줄이고 외주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서는 무급휴직 시도가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STX조선에서, 얼마 전 성동조선에서 그것이 이뤄졌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일부 활동가들은 ‘현대중공업 사측이’ 위기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노동자들에게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넣고, 저항의 태세를 흐트러뜨릴 위험이 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구조조정에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도 단호하게 저항해야 일자리와 삶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구조조정은 노동자들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와 올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 경제는 “파탄 직전”의 위기로 치달았다. 지역 산업단지의 협력업체 수백 곳이 줄도산 했고,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그 지역을 떠났다. 조선소가 밀집해 있는 거제·통영·울산 등지도 실업률이 갑절 이상으로 치솟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구조조정이 단지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권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이 얽히고설긴 정치 이슈로 대두되는 이유다.

특히, 경제 불황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국가적 차원의 정치 문제다. 정부는 어떤 산업을 축소할지 말지, 그 속에서 어떤 기업을 죽이고 어떤 기업을 살릴지, 인력 규모를 어떻게 조절하고 노동비용은 어떻게 절감할지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조선업 구조조정의 정책적 방향을 세우고 관장하며 기업주들의 이해관계를 뒤흔들고 있다. 두 정부는 모두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표방하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서 똑 닮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기본적인 정책 구상을 담았다. 핵심은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쟁력을 갖춰 놓자는 것이다. 빅3는 기존의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그중 대우조선은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고, STX·성동조선 등은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업계 자율의 합방을 통해 중견조선사들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업주 살리기

다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리 조선업을 살리는 정책을 표방한다. 박근혜가 조선산업을 축소시키는 다운사이징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나중에 시장이 회복돼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국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조선업을 지키고 숙련 노동력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살리겠다는 게 고통에 내몰린 조선업 노동자들이 아니라, 한국 조선산업과 기업주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를 위해 숙련 노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것, 그것은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규직의 고용은 (웬만하면) 유지하더라도 임금을 대폭 깎고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 십수만 명을 일터에서 밀어내어 그중 일부를 얻어쥌게 만들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보릿고개를 강요하며 말려죽이라는 셈이다.

실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은 그 실체를 명확히 제시했다. 즉, 올해 상반기 STX조선, 한국GM, 금호타이어 등의 구조조정이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극찬한 것이다. 노조는 임금과 복지를 양보하고, 기업은 해고 대신 무급휴직이나 전향배치를 추진한 “고용진화적 구조조정”이었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반기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고용불을 추락

시키고,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켰다. 해당 기업과 연관 협력업체 노동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일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고용을 지킨 노동자들은 수년의 무급휴직과 임금삭감으로 심각한 생활고에 처했다.

문성현은 특히 상반기 구조조정이 노사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높이 산다.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친문 인사인 울산시장 송철호는 최근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와 함께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목적이 다르지 않다. 송철호는 그동안 ‘희망퇴직’ 등 현대중공업 사측의 인력 감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기업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들도 임금을 양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 그래도 임금이 대폭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더한층 고통을 강요하겠다는 의미이다.

울산시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풍력발전 단지 조성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당면 고통을 해결할 대안이 되기 어렵다. 아직 첫 삽을 불 수 있듯이, 상반기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고용불을 추락

시키고,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켰다. 해당 기업과 연관 협력업체 노동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일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고용을 지킨 노동자들은 수년의 무급휴직과 임금삭감으로 심각한 생활고에 처했다.

문성현은 특히 상반기 구조조정이 노사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높이 산다.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친문 인사인 울산시장 송철호는 최근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와 함께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목적이 다르지 않다. 송철호는 그동안 ‘희망퇴직’ 등 현대중공업 사측의 인력 감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기업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들도 임금을 양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 그래도 임금이 대폭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더한층 고통을 강요하겠다는 의미이다.

울산시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풍력발전 단지 조성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당면 고통을 해결할 대안이 되기 어렵다. 아직 첫 삽을 불 수 있듯이, 상반기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고용불을 추락

시키고,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켰다. 해당 기업과 연관 협력업체 노동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일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고용을 지킨 노동자들은 수년의 무급휴직과 임금삭감으로 심각한 생활고에 처했다.

문성현은 특히 상반기 구조조정이 노사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높이 산다.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친문 인사인 울산시장 송철호는 최근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와 함께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목적이 다르지 않다. 송철호는 그동안 ‘희망퇴직’ 등 현대중공업 사측의 인력 감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기업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들도 임금을 양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 그래도 임금이 대폭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더한층 고통을 강요하겠다는 의미이다.

울산시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풍력발전 단지 조성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당면 고통을 해결할 대안이 되기 어렵다. 아직 첫 삽을 불 수 있듯이, 상반기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고용불을 추락

경제 불황에서 누구를 구할 것인가

다시 위 논점으로 돌아가면, 경제 불황에서 시행되는 구조조정은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어느 한 부문·사업장의 구조조정도 단지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흔히 ‘정치’ 하면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나 민주당과의 협조로 생각하기 일쑤인데, 앞서 봤듯이 그것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조건을 지키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문재인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지금, 급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등의 노조 지도자들이 사회적 대화에 기대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르크스주의의 의미에서 정치는 이런 개혁주의 정치와 완전히 다르다. 국가 권력을 파트너로 삼는 게 아니라 대중투쟁을 조직해 그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뜻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에서도 정부를 뒤편에 세워 놓고 책임을 몰아야 한다. 경제 불황 상황에서 정부는 누구를 구할 것인가? 예산을 어디에 책정할 것인가? 탐욕스러운 기업주들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지켜라!

지금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불황 속에서도 기업주들은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고통 당하는 동안, 정기선은 3000여 원의 주식을 증여 받으며 최대 주주가 됐고, 현대중공업그룹은 1년 새 사내유보금을 12조 원 이상 늘려 사내유보금 보유 순위 7위에 올랐다.

노동운동은 이런 사용자들을 비호하는 문재인 정부에 오히려 항의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사측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일자리 보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도·파산 기업의 경우 국가가

그 기업을 인수·운영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조선업은 한국 경제를 일으킨 “효자산업”으로 여겨져 왔다. 그만큼 조선업 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의 부와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다. 더구나 정부는 조선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은 애물단지가 된 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시키는 과정에서 불황을 만드는 데 일조한 장본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들을 구하는 데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그래야 할 의무가 있거니와, 그만큼 능력이 있다. 기업주·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일자리 보장에 사용할 수 있다. 단지 그러려고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회

그간의 상황을 돌아보면,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는 정치 영역에서 지배자들의 분열과 갈등을 낳을 만큼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노동운동은 정부를 압박하며 노동자들의 희생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음을 보여 줄 기회도 있었다.

특히, 2015년 말과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의 해법을 3000여 원의 주식을 증여 받으며 최대 주주가 됐고, 현대중공업그룹은 1년 새 사내유보금을 12조 원 이상 늘려 사내유보금 보유 순위 7위에 올랐다.

노동운동은 이런 사용자들을 비호하는 문재인 정부에 오히려 항의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사측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일자리 보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도·파산 기업의 경우 국가가

정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임금 동결 등 양보를 거듭했다. 지도부가 조업원의 고용과 임금, 조건 등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도 강조됐다(2015년 12월 21일 <매일노동뉴스>). 급속노조와 현대중공업 등의 노조 지도자들이 조선업 육성 전략을 내세우면서 기업 경쟁력 논리에 단호히 맞서지 못했던 것도 기회를 날려보내는 데 큰 몫을 했다. 경쟁력을 키우려면 노동자들도 임금 삭감이나 노동조건 후퇴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스스로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들은 어느 한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관철하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다른 기업 노동자들의 조건 후퇴를 압박하는 각개격파 식으로 ‘바닥을 향한 양보’ 압박을 지속해 왔다. 여기에는 국내 조선사들뿐 아니라 중국·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됐다. 아쉽게도 노조 지도자들은 이런 압력을 수용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치했다.

이런 양보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시장의 경쟁 논리에 도전하며 저항과 항의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 등의 좌파적 활동가들은 기층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를 실행하고 영향력을 넓힐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특히, 사회 전체와 국가 권력 문제를 언제나 심각하게 고려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야를 사업장 안으로만 가두지 않고 반자본주의적 계급 정치에 입각해 투쟁을 건설하려 애쓰는 혁명적 조직 건설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

울산시의 풍력발전 계획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의 위협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 이를 내맡겨서 는 효과도 작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 제만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도 근본 에서는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제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도 모를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멸종한 삼림을 훼손하고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대형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업들이 이를 책임질 수는 없

다. 예컨대 최근 울산시는 울산 앞바다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민간 투자를 받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현대중공업 등을 참여시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 중인 계획은 부유식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현대중공업의 해상플랜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송철호의 정치적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장 일감이 떨어져 하고 위험에 시달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부유식 풍력발전 기술은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고 앞으로 몇 년

은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발전기 관리 업무를 제외하면 제조와 건설에 필요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는데 현대중공업이 이를 정규직 일자리로 채울지도 알 수 없다. 임금 등 노동조건은 더욱 낙관하기 어렵다.

사실 현대중공업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풍력발전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돈벌이가 안 된다며 문을 닫아 버렸다. 앞으로도 이리저리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자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만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호중



안희정 무죄 판결은 편협하고 보수적인 성폭력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 줬다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최미진

미투 운동과 안희정 무죄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미투 법안’들이 140건 넘게 발의됐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 강화를 제외하면, 다른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열린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참가자들은 이를 강력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성평등 과제에 대해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라는 시위대의 요구는 완전히 옳다.

특히 안희정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현행 강간죄의 편협하고 보수적인 요건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견해가 갈리지만, ‘가해자가 폭행·협박·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교를 했다면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공통된다.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 취지는 지지받아 마땅하다. 현행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게다가 ‘여성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받는 최협의 설이 통용되고 있다. 이는 성관계 합의 여부가 아닌 피해자의 저항 수준을 성폭력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다.

최협의설에 따르면, 여성의 의사에 반해 물리적 제압이 있는 상태에서 성폭력이 벌어졌더라도 여성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도 사실상 이런 잣대를 들이댔다.

그러나 이런 편협한 잣대로 포괄할 수 없는 성폭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공포에 휩싸이거나 불이익이 걱정돼 적

극 저항하지 못한 경우, 저항하면 더 큰 폭력이 뒤따를까 봐 저항하지 않은 경우,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못한 경우 등등.

현행 강간죄의 편협함

따라서 성폭력 판단의 기준은 피해자의 저항 수준이나 가해자의 의도, 사건과 무관한 여성의 ‘행실’ 등이 아니라 여성의 성관계 동의 여부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은 ‘정조’ 침해 범죄가 아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규정돼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No Means No Rule’(여성의 노는 노다,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법)이 확립돼야 한다.

최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 간음죄’ 형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을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만 폭행·협박의 유무나 그 수위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는 제안이다. 지지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입증의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물론 성폭력 범죄는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증만을 성폭력 피해 인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물증 지상주의’는 배척해야 마땅하다.

또한 공정한 진상조사 전에 이미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는 등 여성의 피해 호소가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관행에 반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호소 여성의 진술은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가정 하에 진지하게 경청돼야 한다. 그리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정합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의 하나로 채택돼야 한다.

하지만 기계론적으로 적용된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른다면 합

정이 있을 수 있다. 즉,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해호소인의 인식과 주장, 감정만을 중심으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 주관주의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증거주의와 피해호소 여성 진술 존중의 종합’이 필요하다. 여성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의 하나로 존중하면서도, 관련자들의 증언과 물증도 증거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가 쓴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참고)

한편 다른 몇몇 여야 의원들도 대동소이한 형법 개정안들을 발의했고,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마치 자신이 여성의 대표인 양 기자회견까지 열며 안희정 판결 역풍에 순가락을 얹었다. 미투에 편승해 자신의 우파적 본질을 희석시키고, 향후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안희정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명시적 동의’를 성폭력 판단의 기준으로?

여성운동 일각에서는 ‘No Means No’의 입법화를 넘어 ‘Yes Means Yes Rule’(여성의 예스는 예스다, 상대방이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이것은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에 여성의 적극적이고 명시적 동의 유무를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비동의 간음죄’가 곧 ‘Yes Means Yes Rule’로 확대 해석되기도 한다.

국제적 사례도 있다. 올해 스페인에서 18세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 항의시위가 일어나자, 산체스 총리는 ‘Yes’라고 말하지 않는 성교는 모두 강간으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6년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의 마빈 주커 판사가 ‘적극적 합의’를

성폭력의 기준으로 삼은 판례를 지지하며 소개했다.

여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명시적 합의’를 그대로 법조문에 반영할 경우 만만찮은 난점도 있다. 성관계는 매우 유동적이고 민감하고 복잡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상호 교감하는 스킨십의 연장에서 눈빛과 행동 등을 통한 묵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확답 받지 않았다 해서 모두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의 남용이 될 수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형사법의 성성편향》 전면개정판을 내어 ‘Yes Means Yes Rule’을 비롯한 ‘비동의 간음죄’에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가 ‘비동의 간음죄’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이를 형법 조문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된다면, 성교에 대한 여성의 ‘명시적 동의’나 ‘확정적 동의’가 확보·입증되지 않은 경우, 여성과의 합의에 따른 농도 짙은 상호 애무 후에 시도된 남성의 성교 추구 행위는 항상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성교에 대한 ‘묵시적 동의’나 ‘조건부 동의’는 동의와 거절 사이의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언제든지 피해자의 거절로 해석될 수 있다.” … 합의성교 후 관계가 나빠져서 ‘비동의 간음’이었다고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충분히 예상된다”, “부부가 ‘쿨’하게 헤어지기보다는 이혼 과정에서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허다한 현실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투쟁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조국은 이런 문제제기도 한다. “통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성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를 형법을 통하여 막아주어야 하는가 … 폭행·협박·위력 등이 사용된 성적 자

기결정권 침해와 그렇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구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도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형법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주의의 ‘적’인 가부장주의의 관념의 산물일 수 있다. … 여성은 성교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다.”(강조는 조국의 것)

피해 여성에게 유리하게

조국이 제안하는 “형법학과 여성주의의 교집합”은 “경쾌한(가벼운) 강간죄” 신설이다. 기존 최협의설(“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을 강간죄의 요건으로 삼음)은 유지하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자’도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비동의 간음죄’의 문제의식은 대부분 흡수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Yes Means Yes Rule’의 부작용에 대한 조국의 우려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가 ‘No Means No Rule’ 입법화까지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인 듯하다. 그의 대안에 따르면, 여성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더라도 폭행·협박·위력이 없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하지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성차별 현실을 감안하면, 피해 여성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개정하는 편이 법개정 취지에 맞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다소 폭넓은 정의가 필요하다. 다만 그 구체적 적용 단계에서는 철저한 입증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회색지대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성 문제에서 일도양단 식 편향도 피해야 한다. 이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정치인과 언론인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과 달리, 슈퍼리치들[거액 자산가들]은 명백하게 제러미 코빈을 더 신경쓴다. 10월 5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런던의 슈퍼리치들은 자산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고 그중 일부는 영국을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다. 제러미 코빈이 이끌 좌파적 노동당 정부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이다.”

“억만장자들은 역외 투자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들의 부를 보관하는 영국에 등록된 신탁회사의 위치를 국외로 옮기려 한다.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율을 인상하고 자본 통제 정책을 시행할까 봐, 이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한 자산 관리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슈퍼리치들은 부자에게 더 호의적으로 보이는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대다수 사람들[부자들]은 브렉시트보다 코빈에 대해 10배 더 걱정하고 있다.’”

코빈과 그의 예비 내각 재무장관 존 맥도넬이 리버풀에서 열린 노동당 당대회에서 보여 준 확신 넘치는 행보에[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는 등 여러 좌파적 정책을 선보였다], 일부 슈퍼리치들은 명백하게 겁을 먹었다. [영국의 금융 중심지] 시티오브런던의 한 기업 자산투자기획부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당의] 리버풀 [당대회] 이후로 그 얘기뿐이다. 오늘 아침 고객 한 분이 [영국을 떠나느] 버튼을 눌렀다.”

이런 얘기들은 세계 최대의 조세 피난처 구실을 하는 시티오브런던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시티오브런던의 문제는 그저 러시아 올리가르히[옛 소련 붕괴 후 시장 자본주의로 전



영국 지배자들은 코빈의 온건한 개혁도 용납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연설 중인 제러미 코빈

환할 때 부와 함께 막대한 정치 권력을 누린 집단]가 영국에서 고급 저택과 프로축구팀을 매입하고 자기 자식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덴마크 단스케방크가 커다란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있다. 에스토니아 지점이 2007~2015년 러시아에서 2000억 유로를 빼돌린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국의 기업 형태인 유한책임조합과 스코틀랜드유한조합이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됐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레이철 데이비스 테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형태의 기업들은] 세계의 돈세탁업자들에게 최선의 수단을 제시했다. 은행을 통해 수상쩍은 자금을 보낼 때

영국 기업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시티오브런던이 계속해서 세계적 금융 낙원으로 기능할 것이냐는 문제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면 시티오브런던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돼 [금융허브로서] 파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한다.

위협

그렇다면 코빈 정부는 슈퍼리치와 탈세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위협이 될까? 표면적으로는 별로 그렇지 않다. 페미니스트 철학자 로르나 핀레이슨은 최근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

다. “코빈이 지금까지 제안한 것들은 1970~1980년대 토니 벤 좌파의 기준에서 보면 온건한 정책들이다. …

“코빈의 노동당은 무엇보다 등록금 폐지와 무상보육 확장을 약속했다. 보수당이 축소한 복지를 최소한 일부라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 노동당은 이 정책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 상위 5퍼센트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현재 19퍼센트인 법인세율을 26퍼센트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물론 대저 집권 이전 수준에 전혀 못 미친다. 대저 집권기에도 최저 법인세율은 34퍼센트였다.”

물론 핀레이슨은 이렇게도 지적했다. “특정 정책의 세부사항만큼이나 정책의 맥락과 방향성도 중요하다.” 토마 피케티가 점점 증가하는 부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다룬 연구에서 입증했듯이, 슈퍼리치들은 신자유주의 시기에 매우 큰 이익을 봤다. 정부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슈퍼리치를 위해 온갖 편의를 봐 줬다.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하의 신노동당은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대저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랬던 블레어와 브라운의 정당이 그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하는 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슈퍼리치들이 느꼈을 충격을 상상해 보라. 설상가상으로, 그 정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다.

일부 슈퍼리치는 영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일종의 압박이다. 자본의 해외 도피는 과거에 개혁주의 정부들을 무릎 꿇린 주된 방법이다.

코빈이 총리 관저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커지면, 그 압박은 더욱 직접적이 될 것이다. 언론은 비난의 용단폭격을 할 것이고, 고위관료·경찰·군대는 은밀하게 또는 대놓고 정부 정책의 시행을 방해할 것이다. 코빈과 맥도넬의 정책이 온건할지라도, 그 정책을 관철시키려면 노동운동의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25호 / 번역 최병현

브라질 대선

극우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 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브라질에서 우파가 성장하고 있다. 10월 7일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46퍼센트를 득표했다. 그와 경합했던 노동자당(PT) 후보 페르난도 하다드는 29퍼센트를 얻었다. 보우소나루가 이렇게 많은 표를 얻은 것,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자유당(PSL)이 급속히 성장한 것을 심각한 위험 징후라고 봐야 한다. 보우소나루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부류의 기성 정치권 반대자로 자처하며, “브라질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날 치러진] 총선 결과로 사회자유당이 하원에서

51석을 차지할 듯하다. 57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당에 이어 2위 정당인 된 것이다.

이번 선거로 기성 정치권의 일부 자본가 정당들은 몰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은 2014년 선거에서 48퍼센트를 득표했지만 이번에는 5퍼센트로 추락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가 기성 정치권 반대자인 척하는 허세를 믿거나, 이번 선거를 좌파 포퓰리즘 대 우파 포퓰리즘의 경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보우소나루는 기성 정치권과 연계가 끈끈한 직업 정치인이다.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가장 부유한 선거구에서, 그리고 기독교 우파 유권자 층에서 보우소나루 지지가 높았다. 보우소나루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는 안토니오 해밀튼 모로이다. 그는 군 장성 출신으로, 정부가 “현 정국을 회복”할 수 없다면 군대가 개입해야 한다고 전부터 주장하던 자다.

기권

보우소나루는 지배계급의 투사다. 그는 1964~1985년에 있었던 잔혹한 군부 독재를 옹호해 왔다. 보우소나루는 노동자당 지지자를 사살하겠다고 협박했던 자다. 그는 여성이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고문을 옹호했다. 그리고 보우소나루는 노동계급을 공격하겠다고 맹세했다. 보우소나루는 노동계급의 세금은 올리고, 부자의 세금은 내리고, 복지 예산을 동결

하고, 거대한 공공 자산을 민영화하려 한다. 이번 선거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반대 정서를 잘 보여 준 것은 높은 투표 기권율이었다. [브라질에서는] 투표가 의무인데도 4000만 명이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투표 용지를 훼손했다. 브라질의 총 유권자 수는 약 1억 5000만 명이다. 세계 금융 위기로 브라질은 타격을 크게 입었다. 브라질 경제가 의존하는 상품 수출의 수요가 위축돼서다. 노동자당[의 정책]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부패 스캔들의 주범은 당시 집권 중이던 노동자당 정부였다.

페트로브라스의 자산 중 30조 파운드[한화로 약 4조 4500억 원]가 뇌물로 쓰였다. 노동자당 정부는 일부 노동자 친화적 정책을 시행하며 대규모 비리 스캔들을 무마했다. 부패와 점증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노동자당 지지층이 이탈했다. 보우소나루는 바로 이들을 빨아들이려 했다. 안타깝게도, 이날 선거에서 사회주의적 좌파는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했다. 사회주의와자유당(P-SoL)은 겨우 0.6퍼센트(61만 7000표)를 득표했다. 10월 28일에 결선 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25호 / 번역 김준호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예멘 난민은 한국 정부도 일조한 예멘 전쟁의 희생자들이다

이현주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우익들은 제주 예멘 난민 전원 송환을 촉구 하고 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가까스로 도망쳐 온 예멘인들이 “이슬람 가짜 난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형,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밝혔다.

현재 예멘에서는 무차별적인 폭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최근 유엔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멘에서 거의 매달 친서방 사우디-UAE 연합군에 의한 공습이 있고, 이 때문에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한다고 했다. 이 공습은 시장, 예식장, 장례식장, 병원, 통학 버스를 겨냥하고 있다.

사우디-UAE 연합군은 2015년 이후 예멘의 항구를 봉쇄해, 예멘으로 향하는 물자 반입도 제한했다. “2018년 현재, 178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이고, 840만 명이 기근 직전 상태다.”

“의료 시설은 가동되지 않았고, 깨끗한 물을 얻기 어려웠고, 예멘은 최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콜레라 발병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이런 현실은 우익들의 “가짜 난민”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지를 보여 준다. 또한 예멘 난민 송환 요구가 범죄적 행위임을 보여 준다.

예멘에서 제국주의 국가들과 지역 강국들

은 수많은 무고한 목숨을 대가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패권을 위해서다. 미국·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예멘의 전 대통령 알-하디와 사우디-UAE 연합군을 지원한다. 이에 맞서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한다.

예멘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데 한국 정부도 얼마간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는 예멘에 폭격을 퍼붓고 있는 UAE와 사우디에 군사 지원을 해 왔다.

한국 정부의 군사 지원

2011년 파병된 아크부대(특전사 병력)는 UAE군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016년에 한국 정부가 사우디에도 180억 원 규모의 특수 폭탄을 판매했음을 폭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UAE와의 군사협정을 되돌릴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9월 4일 아크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정부는 2011년 아크부대 주둔 후 UAE의 한국 무기 수입이 2600만 달러에서 11억 2900만 달러로 “약 40배 성장”했다고 자랑까지 했다.

예멘 난민들은 한국 정부도 일조한 전쟁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책임이 있다.

지난달 정부는 일부 예멘 난민들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자 지위는 불안정한 체류 말고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다.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고, 가족을 데리고 올 수도 없다.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게 법적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예멘에 폭격을 퍼붓고 있는 UAE와 사우디에 군사 지원을 해 왔다

정부의 난민 차별 정책은 우익의 기를 살려 줄 뿐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인종차별적 우익에 굴복해 예멘 등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하고, “가짜 난민”을 쫓아 내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난민법도 개악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짜 난민”은 전혀 쟁점이 될 수 없다. 난민인정률이 4퍼센트인 현실을 보라. 그런데도 정부가 “가짜 난민” 문제를 내세워 심사를 강화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인정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위험하다. 인종차별적 우익들의 주장을 정당화해 줌으로써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고, 사회 전반에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험을 보면, 정부와 주류 정치인들이 조장한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 덕분에 극우 세력

은 난민 위기를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나치 정당 국민전선(FN)은 지난해 대선 결선 투표까지 진출했는데, 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프랑스 주류 정치권이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를 조장한 결과다. 주류 정치권이 2004년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난민 혐오 세력의 우익적 본색

난민 혐오 세력들은 자신들이 ‘좌도 우도 아니고 국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익적 본색을 숨길 수는 없다.

난민 반대 집회를 주최한 ‘난민대책 국민행동’ 카페 운영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난민 반대와 맞닿아 있다”고 최근 공지글에서 밝혔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탄압받았다는 것이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난민,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기독교 우익의 핵심 코드를 공유한다. 북한에 대한 냉전 우익적 메시지 전파는 물론이다. 이들은 최근 <한겨레>가 폭로한 ‘에스더기 도운동’의 가짜뉴스가 전파된 주요 유튜브 채널들을 ‘진정한 언론’이라고 여긴다.

최근 이들은 난민만이 아니라 “불법체류자 추방”을 내걸고 10월 14일 이주노동자 대회를 겨냥해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난민에서 나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혐오 선동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집회 연단에 김진태(자유한국당), 조경태(자유한국당), 이연주(바른미래당) 같은 우파 정치인들을 세웠다.

김진태는 반동 보수적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부대의 ‘히어로’였다. 극우 사이트 ‘일베’에 접속한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일베 의원’이라는 별명도 있다.

이연주는 (정치적 선언일 뿐, 합의 이행과

정이 매우 험난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조차 강력 반대할 만큼 냉전 우익적인 인물이다. 지난해 이연주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 거냐”고 말해 반동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우익들의 환심을 사려 난민 혐오에 앞장서고 있는 우파 정치인들의 작태가 팔사납다.

난민 혐오 세력은 “야당의 난민법 폐지 당론 채택도 산넘어 산”이라면서도 자유한국당을 ‘난민법 폐지’ 의제를 관철시킬 국회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반대로 민주노동이나 노동자연대 같은 좌파 세력에는 “전문시위꾼들”이라며 강한 적대감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은 ‘태극기 집회’와는 ‘1도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9월 16일 난민 반대 집회에서 사용된 방송차와 무대차량은 모두 태극기 집회에서 쓰던 차량임이 확인됐다.

이들은 ‘난민 유입으로 인한 여성 대상 성범죄 증가’ 운운하며 난민 배척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들의 우익적 본색을 보면, 애초 이들은 ‘여성 인권’에는 관심 없는 자들이었다.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해 우익 포퓰리즘 확산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최근 우익들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기가 살아 성소수자·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공격하며 세력을 결집하려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 크게 위축됐던 세력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난민·이주민 공격은 노동자 공격의 다른 얼굴

난민·이주민에 대한 공격은 최저임금 삭감이나 노동유연화, 의료 민영화, 연금 삭감 등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의 다른 얼굴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난민·이주민에 대한 공격은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려 노동자 계급의 삶을 악화시켜 온 진정한 원인을 가리려는 것이다. 특히 개혁을 표방한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은커녕 우향우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의식해 난민·이주민을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당장 국가기간시설의 안전 관

리 실패(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연관된) 문제를 소박한 꿈을 안고 일해 왔을 한 스리랑카 노동자의 죄로 뒤집어 씌우는 걸 보라.

인종차별적 우익들은 ‘가짜 난민’들이 체도를 악용해 한국 체류를 하고 세금을 축낸다고 비난하지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고작 4퍼센트다. 최근 난민 신청이 늘고 있다지만, 여전히 한국 이주민의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올해 전 세계 난민 신청자의 고작 0.4퍼센트가 한국에 왔다.

또한 난민에 대한 정부 예산은 1년에 20억 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운영비가 포함된 수치라 실제 난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생계비 지급 대상인 난민 신청자 1만 3294명 중 단 3.2퍼센트만이 실제로 생계비를 지급 받았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8억 17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2019년 국방비 예산 49조 7000억 원의 0.0016퍼센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부와 자원이 없는 게 아니다. 노동자에게든 난민에게든 대중의 필요에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가 문제다. 이 사회의 근본적 분단선은 계급이지, 국적이 아니다.

지배자들의 분열 지배 시도에 맞서 난민을 환영하고 난민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도 이로운 이유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주현

지난 3월 25일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21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법은 국가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라고도 한다. 이는 문제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은 국민청원에 답하며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11월에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도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며 한부모 가족을 위한 국가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한부모 단체들이 정부의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검토를 크게 환영하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나쁜 경제 상황을 의식하며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약속을 뒤집고 있는 문재인이 이 약속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양육비 대지급제를 시행하면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자한테서 받아내지 못했을 때 국가 예산으로 채워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23%만 사후에 받아낼 뿐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하지 않고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최근에 결성된 한부모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양육비 해결모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제인의 공약 파기를 우려하며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삼중고

한부모들은 대체로 홀로 생계·양육·가사를 모두 책임지는 삼중고에



양육은 국가의 책임이 돼야 한다

시달린다. 특히 노동계급 한부모의 처지는 더 열악하다. 2016년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약 44만 가구)의 평균 소득은 190만 원이다. 정부지원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전체 한부모의 47퍼센트를 차지했다.

한부모들은 혼자서 생계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또 양육도 병행해야 해서 시간제 등 저질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들의 처지는 여성 차별이 결합돼 더 열악하다. 미혼모들의 월평균 소득은 92만 원에 불과하고 이중 66만 원을 양육비로 쓴다. 직업이 없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다.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한부모 가족의 51퍼센트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 보증금을 낼 돈도, 다달이 내야 할 월세도 한부모 가족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증가하

면서 ‘증평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돼 왔다.

양육비 대지급제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염원하는 이유는 비양육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한부모와 자녀들의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양육비 대지급제로 한부모 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

한부모 가족 대부분이 겪는 빈곤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다. 비양육자가 가난한 노동계급인 경우, 단지 개인의 무책임함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다.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소송을 하는 비율은 6.7퍼센트에 불과하다. 설문조사 결과,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 양육비

를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이혼이나 결별 후 이전 파트너와 얽히기 싫어서’인 경우가 40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비양육자가 경제적 형편이 안 된다고 답한 경우도 25퍼센트나 된다.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해도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 중에는 이전 파트너와 얽히기 싫어서 양육비 신청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대신 지급할 양육비 규모는 비양육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르므로 소액밖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비양육자가 무일푼이라면 이 제도는 한부모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될 것이다. 결국 한부모의 다수는 이런 대책으로는 빈곤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국가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으로 양육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복지를 대폭 확대하라는 요구를

회피할 수 있다.

한편 한부모 단체들과 일부 우파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도 요구한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양육비 지급 약속을 무시하는 일부 무책임한 비양육자들이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은 양육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쁜 아빠’들을 찾아가 망신을 주기도 한다.

양육비가 절박한 한부모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국가의 무책임한 방치가 아닌 양육비를 때먹는 개인들에게 주된 화살을 돌려 진정한 문제를 놓치기 때문이다.

국가는 한부모 복지를 대폭 확대하라

지배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굴러가게 하는 노동자들을 출산·양육하는 노동력 재생산 업무를 개별 노동계급 가족에게 떠넘긴다. 또한 ‘생명 존중’ 운운하며 낙태를 금지하지만, 위선적이게도 빈곤 아동이나 한부모 지원 등 이미 태어난 ‘생명’을 지원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한국은 OECD 평균에 비춰 봐도 가족·양육 복지가 열악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복지를 확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도 공약 배신, 임금체계 개악으로 저임금 고착화하기 등 노동자 쥐어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계급 한부모 가족은 한층 더한 고통에 내몰릴 것이다.

미래와 현재의 노동자들을 놓고 기르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힘 없는 개인을 질타하기보다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을 내놓으라고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 한부모 가족에게 괜찮은 주택, 현실적인 양육비 등 실효성 있는 복지가 제공돼야 한다.

문재인인의 인색한 한부모 양육비 인상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한부모 양육비 지원금을 인상했다.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 지원금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아동 연령 기준도 현재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된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 혜택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전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필요한 수준에 비춰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은 64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양육비 수급 기준도 불합

리한 점이 많다. 한부모 가족 구성원의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한부모에 자녀 한 명으로 구성된 2인가구의 경우 그 액수가 151만 원이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르면(2019년 기준 월급 157만 원) 정부 지원금은 ‘그림의 떡’이 된다. 애초에 지급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생긴 문제다.

또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거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을 받아도 소득으로 환산돼 양육비 지원 자격에서 탈락하기 십상이다. 많은 한부모들이 ‘우리는 평생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으로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리

는 이유다.

이렇게 저소득 한부모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누가 더 가난한지 증명하는 경쟁을 하게 만든다. 비참하고 모욕적이다.

또한 선별 복지는 한부모들이 ‘세금 도둑’이라는 악의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미혼모를 비롯해 한부모 가족들은 사회적 냉대와 멸시 때문에 한부모 가족임을 티내지 않으려고 지원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은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충분히 걷고 군사비를 줄여 가족·양육 복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 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김은영

보육, 요양 등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장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수익성 위주의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이 팽창하면서 보육, 요양, 의료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민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회서비스에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데 그 운영은 민간업자들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 시설은 이윤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턱없이 적게 공급되는 한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는 형편없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강요돼 왔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은 사회서비스의 질도 낮출 수밖에 없다.

열악한

“보육 노동자들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소왕국에서 일하고 있다.”(이현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 1·2 지부 대표지부장) 어린이집 원장들은 제멋대로 본인 수당금액을 늘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보육 교사들을 해고로 위협하는 등 온갖 갑질과 횡포를 부리고 있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으로 휴게시간이 의무화됐지만, 인력 충원이 안 돼 보육교사들은 여전히 휴게시간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은 적어도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과 월급제 시행을



9월 28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촉구 기자회견

간절히 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이다.

시설요양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인데다 올초부터는 처우개선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치매 환자나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운 환자들을 부족한 인력으로 돌보느라 낙상 사고도 자주 일어나 인력도 충원하

길 원한다.

재가요양 노동자들은 보통 하루에 3~4시간밖에 일하지 못해 임금이 쥐꼬리만 하다. 대부분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인데 몸을 쓰는 일이 많아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임금을 병원비로 날리고 있다. 그래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노동강도를

완화하길 원한다.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노동법 위반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시장화 폐해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가가 전적인 책임

을 지는 것이다. 국가가 충분한 재정 지원과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사회서비스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면 일자리 안정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높은 이직률도 낮아져 숙련된 노동을 제공할 수 있기에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생색내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문재인 정부는 광역자치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보육·요양 일자리 중 25만여 명(40퍼센트)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 개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여전히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민간으로 남겨 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 계획이라도 하루 빨리 시행돼 처우가 개선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을 시행하지도 않고 사회서비스원으로 후퇴하는 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추진 계획은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 계획이 들어 있지 않고,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도 빠져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재정 지원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보호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의 대상 규모와 해당 분야를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국공립시설 중 신규 시설과 위·불법을 저지르거나 평가가 저조한 시설만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되고 대부분의 국공립시설은 포



국공립 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함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즉, 전체 사회서비스 중 극히 일부만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재정 지원을 최소화해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들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게 하고 경영평가도 시행하려 한다. 그리 되면 시설들은 수익성 압박에 시달리게 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분야별 회계 구분 없이 수익성이 좋지 않은 시설들은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남인순 의원 법안에 공공인프라 확충, 정부

재정 지원 등을 명시해 대체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국회의원을 채우지 못해 아직 발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후퇴

이런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조차 자유한국당 등 우파 야당들과 민간업자들은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까 봐 과거에 반대했던 유보 통합(유아교육인 유치원과 보육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침)을 위해 보육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이 사회서비스

원 설립으로 후퇴했지만 이조차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조차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돼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보잘것없는

내년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은 서울, 경기, 경남, 대구 광역자치체 시범사업에 고작 68억 원을 배정해 놓은 게 전부다.

이대로라면 내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으로 창출될 일자리의 규모는 매우 보잘것없고 일자리의 질도 형편 없을 것이다. 내년 예산 계획에 있는 추가 일자리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시간제 일자리 중심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시범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 규모는 소규모일 것이다. 민간업자의 반발과 예산 부담을 이유로 보육시설은 사회서비스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준다고 밝혔지만 재가요양,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전일제 및 월급제 시행에는 한참 못 미친다.

심지어 내년에 시범사업만 시행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실제로 추진하

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충과 정부의 재정 지원과 책임이 강화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요구하며 10월 13일 돌봄노동자 행진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의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 노동자가 참여한다.

민주노총이 일자리 공공전문위원회에서 복지부와 사회서비스원 계획과 관련해 공공인프라 확충, 재정 지원, 임금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바람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공공인프라 확충과 재정 지원에 열의 없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함께 참가합니다!

제대로가자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행진

일시 : 10월 13일(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장 앞
주최 :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의료연대 돌봄지부·재가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보육1·2지부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김지윤

10월 9일 법원은 전 대법원장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벌써 4번째 기각이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양승태가 박근혜 청와대와 주요 판결들을 거래한 의혹과 자료들을 공개했지만 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는 이처럼 지부진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뱉은 “반성, 진상 규명, 엄중 문책” 등이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지배계급과 기성 체제를 건드리지 않고 개혁을 선사하겠다는 문재인식 적폐 청산의 한계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와 사법부는 반(反)노동계급 판결을 거래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그중 하나였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중형 판결을 박근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협조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미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국면에서,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업무수첩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를 사용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안보 문제를 강조하고, 노동계의 좌파 정치를 위축시키려 한 것이다.

정당 해산의 핵심 고리는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이었다. 검찰은 2013년 9월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진보당 활동가 7명을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이 그해 5월 합정동에서 ‘RO’라는 모임 회합을 하며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프락치 공작을 폈고, 강연 내용 ‘녹취록’의 800여 곳을 위조했다. 대대적 마녀사냥이 벌어졌다.

곧이어 11월 박근혜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듬해 12월 현재는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첫 변론이 시작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변론을 종결하고서 24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현재소장 박한철은 국감에 나와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지배자들에게 약속하기도 했다. 재판 기록만 17만 5000쪽



문재인 정부에서도 감옥에 갇힌 사상·표현의 자유 정부는 ‘양심수 사면’ 촛불 민심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 넘는데도 말이다. “형식적 재판 시능”, “기획된 결정”(진보당 측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당시 현재는 진보당 해산의 주요한 근거로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을 들었다. 이를 두고 내놓은 증거라고는 이석기 의원 등이 모인 ‘RO’ 회의 석상의 발언,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정도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자민통계 활동가들이 모여서 정치 토론을 벌인 것을 봉기 준비 모임인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한 것이었다. 설령 당시 모임에서 ‘과격화’ 표현과 주장이 있다 한들 구체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었다. 무엇보다 당시 모임과 주장은 진보당의 공식 입장이나 결정도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도 현재는 이 토론 모임이 진보당 활동으로 귀속된다는 역지를 부렸다. 더군다나 당시는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오히려 현재는 자신들의 판결로 ‘내란 음모’ 사건 판결에 압박을 주려는 듯했다.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선거적 이익을 위해 유시민의 참여계와의 통합

하는 과정에서 기존 민주노동당의 좌파 개혁주의 강령을 대체하면서 나온 것으로, 민주노동당 내 좌파의 비판을 받았던 강령이다.

당비를 내는 당원이 3만 명에 이르고, 국회의원 6명을 가진 진보정당이 재판관 몇 명에 의해 해산되고야만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 폭거였다.

현재의 해산 결정은 한 달 뒤 나온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정치 사상 탄압이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결정의 핵심 근거였던 ‘RO’ 모임이 실체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단지 토론했다는 이유로 9년 형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판결했다.

당시 검찰은 내란을 실제로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증거를 재판에서 내놓지 못했다. 2013년 5월 12일 회합 ‘녹취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

원이 총 800여 곳을 위조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구속의 핵심 사유는 “내란 음모”였는데 이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이 사건이 정치적 마녀사냥일 뿐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내란 음모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면 내란 선동도 마땅히 무죄가 되고 구속자들도 풀려났어야 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내용이 제시되지 않아도,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없어도 선동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구체적 조직과 행위가 없더라도 발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처벌의 기준이 ‘내심’이라는 것이고, 이는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 등은 평화적 수단(토론)으로 정치 활동을 했을 뿐인데 대법원은 이것이 살인보다 중한 죄라 판단한 셈이다.(당시 살인죄 선고형 평균은 6.4년이었다.)

이런 근거라면 계엄 실행을 모의하고 구체적 계획까지 세운 기무사야말로 내란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진

보당과 이석기 의원 마녀사냥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은 기무사가 “준비”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제는 토론만 해도 문제라더니 말이다.

심지어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판사 비리를 덮기 위해 이석기 의원 선고일을 조정했다는 것이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따라서 박근혜의 온갖 악행에 분노하고 이를 바로 잡기를 바란 정권 퇴진 운동 속에서 양심수 석방 요구가 제기된 것은 지지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번번이 사면대상에서 “내란 음모” 사건 구속자들을 제외시켰다.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들과 가족들, 구명위원회와 국제 앰네스티 같은 인권단체들은 꾸준히 이석기 의원 석방을 요구해 왔지만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은 무시로 일관했다.

정부가 남북 화해를 강조하고, 정상 회담이 3번이나 성사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그에 준하는 형법상 내란음모 조항을 이용한 탄압을 정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구속자는 모두 만기출소했다. 이석기 의원은 6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전두환은 고작 2년 만에 사면됐는데 말이다. “이석기 전 의원을 감옥에 두어서 사법적폐를 청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민중당)

검찰은 몇 달 전, 대북 사업가 김호씨를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적폐 청산은커녕 희대의 악법인 보안법을 이용해 진보·좌파를 공격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인의 적폐 청산, 개혁은 위선적이다.

그런데 정당 해산 심판에서 진보당 측을 변호하고, 이후 현재 판결을 비판하는 책을 집필했던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관 청문회를 통과하려고 현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구속은 박근혜 정권의 악행이다. 그러나 그 적폐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는 필요할 때만 인권, 민주주의 앞세우지 말고 이석기 의원을 하루빨리 석방해야 한다.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10월 7일 오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 취발유 탱크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80만 리터의 기름에 불이 붙었다. 서울 잠실이나 심지어 부천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보일 만큼 큰 사고였다.

화재의 계기는 사소한 실수였다. 가까운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재미 삼아 날렸다가 저유소 안 잔디밭에 떨어진 것이다.

탱크 주변에는 화재 감지기 등 최소

한의 예방 장치가 없었고, 잔디밭에 붙은 불을 18분이나 방치하는 등 감독도 턱없이 부실했다.

또, 저유소의 안전을 고려하면 탱크 안 유증기를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장치가 있어야 했지만 그것을 환기구로 대신하는 바람에 외부에서 발생한 불이 탱크로 옮겨 붙을 수 있었다.

이 곳은 지난번 민주당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시절 민영화된 시설이다. 지금도 정부가 10퍼센트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민영화의 노골적인 이윤 우선 논리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끼쳤을 법하다.

따라서 기업주와 정부가 이번 사고의 진정한 책임자다.

그런데 경찰은 화재 책임을 풍등을 날린 개인에게 돌리려 한다. 여러 각도에서 찍은 CCTV를 공개하고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를 종살화(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로 인한 화재) 혐의로 긴급 체포했던 것이다.

이는 진정한 책임을 가리는 희생양 삼기다.(이주노동자라서 더 만만하게 보기도 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안전에 투자하고 필요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형 사고의 배경에는 더 큰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있음을 보통의

많은 사람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시설이 어떻게 풍등 불씨에 폭발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이들이 허탈해 했다. 검찰도 여론에 부담을 느꼈는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영장 발부를 반려했다.

이주노동자 개인을 희생양 삼으려는 시도에 반대하면서, 민영화나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안전 투자와 규제를 대폭 강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김승주



문재인의 “포용 국가”에 이주노동자는 없다

임준형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실업과 복지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단속 과정에서 미안파 출신 건설 노동자 편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떨어져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10명이나 된다.

정부는 “건설업 등에서 국민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서라며 단속 강화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용난은 이주노동자 때문이 아니다. 악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해 온 기업주와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

기업주들은 건설노동자들을 임시·일용직으로 채용하는 불합리한 고용 구조를 유지시키며 일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시켜 왔다. 이를 위해 매일 1~2명씩 죽어나가는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또 고용주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이주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공격도 벌이고 있다. 그중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업무량은 줄이지 않으면서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몰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아예 삭감하려는 시도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삭감 시도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주민에게 더 불리한 건강보험 제도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취득을 위한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부 이주민들은 전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악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

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치 이주민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기라도 하는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2015년 2488억, 2016년 2093억, 2017년 2490억의 흑자를 안겼다. 진정으로 내국인들의 의료복지를 위협하는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용 등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이다.

이와 같은 공격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공격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 받는다면, 이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될 수 있다. 단속 강화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등에 맞서 내국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단결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격이 먹힐수록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정부와 기업이 아닌 이주노동자를 향하도록 해 노동자들 사이에 반목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것은 현실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더 크게 단결하며 투쟁을 진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런 공격에 맞서 10월 14일 전국이



김종민 기자

언제 어디서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주노동자 대회가 열린다. 전국 집중 집회이고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해마다 가장 중요한 요구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를 요구해 왔다. 여기에 더해 단속 추방 중단, 최저임금 개악 반대 등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격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속죄양 삼으며 난민 혐오를 퍼트리

고 있다. 그래서 올해 집회에서는 “난민법 개악 반대! 난민 혐오 중단과 생존권 보장!” 요구도 곁고 우익들의 혐오 선동에 맞설 것이다.

최근 우익들은 난민만이 아니라 “불법체류자 추방”을 내걸고 10월 14일 이주노동자 대회를 겨냥해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난민뿐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혐오 선동 대상을 삼고 있다.

정부의 공격과 우익들의 혐오 선동에 맞서 이주노동자 대회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고용허가제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

올해로 시행 14년째인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에 공급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목적을 위해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것이 큰 고통을 낳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사용자에게 종속시켜 열악하고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이를 견디다 못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연이어 자살하기도 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도 자의적으로 제한한다. 최초 3년 체류를 허용하고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비인간적인 통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바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다. 고용허가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면 이런 통제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해 일손이 부족한 열악한 일

자리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해 왔다. 한국 사회는 이를 통해 큰 편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정부는 사용자들의 필요에 반응해 애초 3년이었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을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점차 9년 8개월까지 늘려 왔다.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체류를 허용하는 점수제 비자제도로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런 변화 과정은 고용허가제가 내세우고 있는 ‘단기순환 원칙’과 현실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주노동자들이 길게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며 적응한 곳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통계청의 2015년 조사를 보면 전체 체류외국인의 85.6퍼센트가 체류기간 만료 이후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2월 내놓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 2022년)에서 “정주화 방지”를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순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체류기간” 만기도

래자 출국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없으므로, 결국 정부가 기릴 수 있는 수단은 아만적인 단속 추방이 될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듯하다. 대체로 업종 이동 제한은 그대로 둔 채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업종 제한을 유지하면 노동자들은 여전히 처우가 열악한 3D 업종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장 이동 제한은 없으나 업종 제한의 구속을 받는 방문취업제(H2)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단기적으로 공급한다’는 전제 위에 설계돼 있다. 사업장과 업종 이동 제한, 체류기간 제한은 이런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전제 위에서 제도를

개정을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언제 어디서든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14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고

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해 왔다. 고용허가제 폐지를 분명히 하면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